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한반도 평화

- 3 <권두논문>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발언과 2015 지역질서 건축
이현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 6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 23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 36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근 동아시아 안보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 우선 종전과 경기회복이라는 과제에 직면한 미국을 제외한 동아시아 각국의 국방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국이 장기적 전망과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각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 현황은 이들 국가가 주기적으로 더 많은 국방비를 투여할 가능성을 예견하게 한다.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가의 무기 대외수입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전략적 공격 능력의 차원에서 미국은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지만, 중국은 최근 꾸준히 전략 작전 능력을 신장시키고 있고 러시아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세력균형론, 세력전이론, 공격현실주의, 방어현실주의 등 현실주의이론의 관점에서의 진단은 부정적이다. 아울러 전쟁단계모델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각국이 억지 효과에 대한 막연한 기대로 현실정치(realpolitik)의 전략만을 추구한다면 동아시아의 불안정성은 더욱 증대되어 한반도 평화의 장기적 전망을 어둡게 할 것이다. 따라서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한국이 중견국 외교를 수행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 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이다. 새로운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보 위험요인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가 처한 환경에서 안보의 위험요인은 공간적 그리고 시계열적으로 1) 국내에 내재화된 대내적 위험요인, 2)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험요인, 그리고 3)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험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각각의 위험요인 중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험요인은 (1) 이념갈등,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된다.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험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협, (4) 혐한류의 확산을 의미한다. 끝으로 미래에 남북한 간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 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험요인은 (1) 기회갈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이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에 나타나는 이들 3개 분야 10개 안보위협 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여론조사 자료를 활용해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동북아 지역은 현재 지정학적 위기를 겪고 있다.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신흥세력인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거대한 권력이동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도로 구축된 동북아 지역질서가 해체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격렬한 권력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게 매우 관련한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에서는 '동북아시아대 구상'이라는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 도전에 대응하고자 하였고, 박근혜 정부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이니셔티브를 갖고 대응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질서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한국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이들 구상의 요지이다.

이 시기에 가장 도전적인 요소는 '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이 동북아 국제사회에 정상적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고 있다.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지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진력해야 하고, 남북관계 개선에 열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남북관계 개선은 결국 교섭정책으로 돌아갈 때 돌파구가 열린다.

〈권두논문〉

웬디 셔먼 미 국무차관의 발언과 2015 지역질서 건축

이헌미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지난 2월 27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정무차관의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 연설로 대한민국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 연설 내용 중 특히 논란이 된 부분은, 한국과 중국이 위안부, 교과서, 영해 표기 등 역사인식 문제로 일본과 대립각을 세우는 것에 대한 셔먼 차관의 비판이었다. 그녀는 민족주의가 정권 지지도를 높이는 데 동원될 소지를 언급하면서, 동아시아 지역 협력의 진보를 위해서는 역사에 지나치게 연연하는 대신 미래지향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1차 보도한 국내 언론은 미국이 한일 역사분쟁에서 일본을 편들고 나섰다며 연설의 특정 부분을 부각시켰다. 덕분에, ‘값싼 박수(cheap applause)’를 받으려 하는 정치지도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이냐, ‘소위 위안부(so-called comfort women)’라니 일본의 전쟁범죄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등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국내 여론이 들끓으면서 공식 사과를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미국 국무부가 3월 2일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며 해명한 바 있고, 3월 5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으로 분위기는 일변하였다.

어느 정도 열기가 가라앉자, 국제관계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미일 삼각동맹의 맥락에서 셔먼 차관의 연설을 해석한 논평이 나왔다. 이들은 셔먼 차관의 연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그 이면에 놓인 미국의 전략을 읽고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주장의 요지는 첫째, 한중관계 밀착에 대한 미국의 견제, 둘째, 워싱턴 정가에 대한 일본의 막대한 로비와 미국의 일본 경사에 대한 우려, 셋째, 앞의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대미 외교 재정비의 필요성으로 모아진다.

셔먼 발언에 대한 여론의 초기 반응을 다분히 민족주의적 의분에서 나온 ‘열정’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일련의 견해는 힘의 차이에 기초한 타협을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국제정치적 ‘냉정’이라고 하겠다.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정치가 냉정 혹은 열정의 이분법적 논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냉정과 열정의 혼탕이라는 사실이다. 외교안보 현안 타결과 장기적

지역협력 구상에서 한중일 정책결정자 및 국민들 상호간 인식 변수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면 차관은 계속되는 역사분쟁의 원인을 민족주의와 리더십의 문제로 정리하고, 해결의 실마리 또한 여기에서 발견하고 있다. 경색된 한일 및 중일 관계의 이면에 아베 총리, 시진핑 주석, 박근혜 대통령의 국내정치적 고려가 일정하게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서면 차관이 읽은 것과 달리, 동아시아 역사 갈등은 정권이 일방적으로 주도하기 어려운 국민 여론적 민감성을 띠는 사안이다.

이와 관련,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여론의 영향력이 증가하는 확연한 추세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일정책은 국내적 설득력과 대외적 설득력을 동시에 갖추어야 한다. 전략적 이익을 위해 과거사를 덮자는 서면식 냉정으로는 국내 여론의 반발을 살 테고, 여하한의 타협을 거절하는 한국식 열정으로는 일본사회와 미국 정부를 납득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한일청구권협정 해석을 둘러싼 한일 간 입장 차이를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분리시켜서, 한일청구권협정 조항에 근거하여 중재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조세영, 2015.2.24. EAI 일본논평).

미국 국무부는 금번 발언 이후, 침략 전쟁의 책임과 위안부 일본군 관여를 인정한 무라야마·고노 담화가 자신들의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서면 차관의 발언이 미국 정부의 입장 변경을 의미하지 않음도 분명히 했다. 태평양 전쟁 종전 70주년, 한일청구권협정 5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 정부와 언론은 미국의 지지와 국제 규범을 객관적 근거로 삼아,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후퇴를 경계하고 압박해야 한다. 서면 차관의 발언을 더 이상 문제삼는 것은 오히려 편협한 민족주의적 과민반응으로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포석이다.

“나는 당신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 그러나 겨울은 지긋지긋하다(I don't know about you, but I'm tired of winter).”라는 서면 차관의 발언은 지지부진한 한일관계에 대한 워싱턴의 냉담한 시각을 단적으로 대변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의 결단과 지혜가 강력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국제정치적 겨울의 추위에 가장 시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서면 차관이 이처럼 다소 거칠게 말한 까닭은 한중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미국의 열망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민주당 정부의 대표 협상전략가로서 클린턴 행정부 시절 대북정책 조정관을 역임한 그녀가 동아시아에 대해 잘 모를 리도 없다.

그러나 미국이 동아시아를 ‘우리’가 아닌 ‘당신들’로 인식하는 한, ‘아시아는 아시아인들에게(Asia for Asians)’라는 시진핑 주석의 주장을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다. 동북아 과거사 문제가 여론을 달구는 뜨거운 감자이자 현재진행형인 근본 원인은, 이 지역에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가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유럽과 달리, 근린국가가 아닌 미국이라는 역외세력이 일본을 굴복시켰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점, 오늘날 동아시아의 지형을 만들어낸 전후 질서 설계의 주역으로서, 미국은 제3자의 태도를 버리고 역사 분쟁의 당사자로서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

셔먼 차관은 연설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의 합의를 여러 번 언급했다. 또한 동아시아의 조화와 협력이 미국 및 세계 다른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이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녀가 말한 것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미국의 안보와 번영에 긴요하다면, 정책환경으로서 지역 문화에 대한 보다 치밀한 감수성이 요구된다.

사회를 본 평화연구소 부소장 더글러스 팔(Douglas Paal)이 평한 것처럼, 셔먼 차관의 이 날 연설은 동아시아의 현안 전반을 포괄적으로 논한 ‘야심찬(ambitious)’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국제질서의 ‘건축(architecture)’과 ‘설계(design)’라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했다.

철학이 있는 건축가라면, 그리고 성공적인 건축물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 장소의 역사와 전통, 그 집에서 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민트 레스토랑, 본태 박물관 등 제주에서도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일본 출신의 세계적 건축가 안도 다다오(安藤忠雄)는 재료의 질감을 그대로 살리면서 자연환경을 인공적 구조물의 미학에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시아 지역 질서의 새로운 도면에서 이러한 미덕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까.

◆ 저자 약력

■ 이현미

現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 저작으로 “반역의 정치학: 대한제국기 혁명개념 연구”(2012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등이 있음.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역지와 군비경쟁
4. 나오는 말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1. 들어가는 말

- 이 글은 최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이 한반도 평화에 가지는 함의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¹⁾
- 군사력 균형에 대한 엄밀한 객관적 판단은 불가능할 수 있음
 -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이 되지 않는 요소들이 군사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또한 군사력 균형에 대한 평가에는 편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활용되는 계량적 지표 중 하나인 국방비 추이와 GDP 대비 국방비 비교, 무기체계의 변화 추이 등을 통해 군사력 균형의 대략적인 평가를 시도함

2.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과 각국의 동향

가. 최근 동아시아 국방비의 추이

- SIPRI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전 세계 국방비는 2012년 대비 1.9% 감소하였으나 미국을 제외한 국가의 국방비 지출은 1.8% 증가하였음²⁾
 - <표 1>에서처럼,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국방비는 12% 증가, 한국의 국방비는 42% 증가, 일본의 국방비는 0.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 기간에 국방비를 두 배(중국 170%, 러시아 108%) 이상 증가시켰음
 - 중국 국방비 증가는 2013년에 7.4%였고 이는 최근 4년간 국방비 성장률이 10%를 하회한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 최근 중국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과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여러 차례의 갈등 국면에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지만 안정적인 국방비 증가율은 중국이 장기적인 계획의 관리하에서 경제성장이 제공하는 여력의 범위 내에서 국방비를 증가시키고 있다는 의미임³⁾

- 그 하나의 증거로 중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04년(2.1%)과 2013년(2.0%)에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2013년에도 일본을 제외한 다른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비중(미국 3.8%, 러시아 4.1%, 한국 2.8%)에도 미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추정치이긴 하지만 2013년에 중국 국방비(\$188b)가 러시아 국방비(\$88b)의 2배가 넘음

〈표 1〉 2013년 국방비 지출 상위 15개국

Rank		Country	Spending, 2013 (\$ b.)	Change, 2004-13 (%)	Spending as a share of GDP (%) ^a	
2013	2012				2013	2004
1	1	USA	640	12	3.8	3.9
2	2	China	[188]	170	[2.0]	[2.1]
3	3	Russia	[87.8]	108	[4.1]	[3.5]
4	7	Saudi Arabia	67.0	118	9.3	8.1
5	4	France	61.2	-6.4	2.2	2.6
6	6	UK	57.9	-2.5	2.3	2.4
7	9	Germany	48.8	3.8	1.4	1.4
8	5	Japan	48.6	-0.2	1.0	1.0
9	8	India	47.4	45	2.5	2.8
10	12	South Korea	33.9	42	2.8	2.5
11	11	Italy	32.7	-26	1.6	2.0
12	10	Brazil	31.5	48	1.4	1.5
13	13	Australia	24.0	19	1.6	1.8
14	16	Turkey	19.1	13	2.3	2.8
15	15	UAE ^b	[19.0]	85	4.7	4.7
Total top 15			1 408			
World total			1 747	26	2.4	2.4

[] = SIPRI estimate.

출처: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러시아 국방비는 2013년에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음. GDP 대비 국방비 비중도 2003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을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국방비의 증가는 러시아가 ‘국가재무장계획(State Armaments Plan for 2011-20)’을 이행하면서 이뤄지는 상황임. 계획에 따르면 러시아는 동 기간에 신형 또는 개선된 무기체계에 총 \$705b를 투자할 예정이고, 계획 종료시 약 70%의 무기체계가 현대화됨⁴⁾
- 일본 국방비는 최근 10년 이상 점차적으로 축소되어 왔으며, 비공식적 제한선인 GDP 1% 규모를 유지하여 왔음.⁵⁾ 그러나 북한 및 한반도 상황과 중국과의 갈등에 대한 고려로 일본의 국방비는 근래에 최초로 2013년에 0.8% 증가하였고, 2014년에도 2.8%의 증가를 예고한 바 있음⁶⁾

2004년부터 2013년

사이의 10년간

미국의 국방비는

12% 증가,

한국의 국방비는

42% 증가,

일본의 국방비는

0.2%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동 기간에 국방비를

두 배(중국 170%,

러시아 108%)

이상 증가시켰음

중국의

무기 수출량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거래량의 6%로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는

212%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군사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

나. 최근 동아시아 무기 수출입 동향

- SIPRI 보고서에 의하면 <표 2>에서처럼 최근 5년간(2009~13년) 미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래된 무기의 56%를 수출하였음.
-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의 국가들이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구입하여, 총 47%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였음. 한국은 이 기간에 미국 무기를 두 번째로 많이 구매한 국가임
- 동 기간에 미국 무기 수출량의 61%가 전투기를 포함한 비행기였고, 향후에도 F-35 최신예 전투기가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 국가에 수출될 예정임
- 러시아는 동 기간에 무기 수출량을 28% 증가시켰는데, 러시아 무기 수출의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3개국에 집중되었음
- 중국의 무기 수출량의 비중은 최근 5년간 전 세계 거래량의 6%로 그리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그 증가세는 212%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이러한 증가세는 중국이 군사기술을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임⁷⁾

<표 2> 무기 수출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구매국(2009~13년)

Ex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 (%)		Main clients (share of exporter's total exports), 2009-13		
	2009-13	2004-2008	1st	2nd	3rd
USA	29	30	Australia (10%)	South Korea (10%)	UAE (9%)
Russia	27	24	India (38%)	China (12%)	Algeria (11%)
Germany	7	10	USA (10%)	Greece (8%)	Israel (8%)
China	6	2	Pakistan (47%)	Bangladesh (13%)	Myanmar (12%)
France	5	9	China (13%)	Morocco (11%)	Singapore (10%)
UK	4	4	Saudi Arabia (42%)	USA (18%)	India (11%)
Spain	3	2	Norway (21%)	Australia (12%)	Venezuela (8%)
Ukraine	3	2	China (21%)	Pakistan (8%)	Russia (7%)
Italy	3	2	India (10%)	UAE (9%)	USA (8%)
Israel	2	2	India (33%)	Turkey (13%)	Colombia (9%)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2

<표 3> 무기 구매량 상위 10개국과 주요 수출국(2009~13년)

Importer	Share of international arms imports (%)		Main suppliers (share of importer's total imports), 2009-13		
	2009-13	2004-2008	1st	2nd	3rd
India	14	7	Russia (75%)	USA (7%)	Israel (6%)
China	5	11	Russia (64%)	France (15%)	Ukraine (11%)
Pakistan	5	2	China (54%)	USA (27%)	Sweden (6%)
UAE	4	6	USA (60%)	Russia (12%)	France (8%)
Saudi Arabia	4	2	UK (44%)	USA (29%)	France (6%)
USA	4	3	UK (19%)	Germany (18%)	Canada (14%)
Australia	4	2	USA (76%)	Spain (10%)	France (7%)
South Korea	4	6	USA (80%)	Germany (13%)	France (3%)
Singapore	3	2	USA (57%)	France (16%)	Germany (11%)
Algeria	3	2	Russia (91%)	France (3%)	UK (2%)

출처: Wezeman and Wezeman(2014), p.4

- SIPRI 자료에 따르면, <표 3>에서처럼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무기를 많이 구매한 국가 10개국 순위에 중국, 한국이 포함되어 있음.
- 중국은 2004~08년 사이 세계 무기 수입량의 11%를 차지하였으나, 2009~13년 사이에 그 비중은 5%로 줄었음. 이는 중국의 군사기술이 진전되어 핵심무기의 자체조달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임. 그런 가운데 중국 무기 구매량의 64%가 러시아로부터 온다는 것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적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는 간접적인 증거일 것임

다. 병력 및 주요 무기체계 현황

- 2013년 동아시아 주요국의 병력 현황은 아래의 <표 4>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주의할 점은 각국의 군사력을 전체 병력의 규모로 단순히 파악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
- 영토의 점령이나 침입한 적군을 격퇴시키는 데에 지상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하지만 최근 들어 해군력과 공군력이 전쟁의 향방 또는 전략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함
- 억지 및 강제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또는 공군력이 지상군보다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능력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 능력은 단순 병력의 비교보다는 해당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표 4> 동아시아 주요국 병력 현황(2013년)

단위: 명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계	1,492,200	247,150	2,333,000	845,000
육군	586,700	151,050	1,600,000	250,000
해군	327,700	45,500	235,000	130,000
공군	337,250	47,100	398,000	150,000
기타	해병대 199,350 해안경비대 41,200	통약 3,500	제2보병 100,000	공수 35,000 전략 80,000 지휘/지원 200,000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6

- <표 5>에서처럼 2013년 현재 해군의 전략적 무기의 수준을 평가한다면, 그 능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의 순으로 볼 수 있는데, 러시아의 능력은 다소 정체되어 있는 반면 중국의 능력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에 머무른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항공모함 전단을 구성하는 순양함, 구축함, 원자력잠수함 등의 기능과 무장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해군력의 측면에서 압도적인 전력 투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는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주요 고려 요소가

억지 및 강제의 측면에서는 해군력 또는 공군력이 지상군보다 유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음. 이러한 능력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력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핵심적 능력은 단순 병력의 비교보다는 해당 무기체계의 질적·양적 비교를 통해 가능할 것임

되어야 할 것임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성능에서는 숫자만큼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략적 능력의 구현에 필수적인 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숫자에서 중국은 미국과 아직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5〉 동아시아 주요국 해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잠수함(척)	58	18	66	53
전략핵잠수함(척)	14	-	4	11
항공모함(척)	10	-	1	1
순양함(척)	22	-	-	5
구축함(척)	62	36	15	18
호위함(척)	13	11	54	9
초계함·연안전투함정(척)	55	6	216	82
소해함(척)	13	30	53	53
상륙함(척)	30	4	85	20
상륙정(척)	245	20	152	19
지원함(척)	71	80	212	636
전투기(대)	823	-	264	41
헬기(대)	670	134	103	212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 (2015), 부록 p.237

- 이런 상황은 공군력의 측면에서도 유사하여, <표 6>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폭격기 숫자는 비슷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으로 전략폭격기를 실전배치하지는 못한 상태임
-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미국보다 더 많은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 성능에서는 숫자만큼의 우위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략적 능력의 구현에 필수적인 급유기와 조기경보기의 숫자에서 중국은 미국과 아직 경쟁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표 6〉 동아시아 주요국 공군력 현황(2013년)

구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전략폭격기(대)	143	-	-	141
폭격기(대)	-	-	90	-
정찰기(대)	350	17	55	114
지휘기(대)	4	-	5	6
전투기(대)	1,258	340	1,505	1,138
수송기(대)	431	65	327	390
급유기(대)	226	5	10	20
조기경보기(대)	33	17	8	23

출처: 대한민국 국방부, 『2014 국방백서』(2015), 부록 p.237

- 군사력 균형을 평가하는 데 고려해야 할 점은 무기체계의 양적인 평가 외에도 그 변화 및 향후 추이에 대한 전망임
- 미국은 최근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 수준으로 군사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적정한 수준으로 국방비를 축소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미국 지상군 병력은 2018년까지 570,000명에서 490,000명으로 감축될 예정이고, 해병대 병력은 20,000명이 줄어든 182,000명 수준으로 감축될 것임. 해군의 경우, 2척의 상륙선과 7척의 타이콘데라급 순양함을 조만간

퇴역시킬 예정이고, 신형 함선 건설 계획의 연기가 예정되어 있음. 특히 2번째 포드급 항공모함과 오하이오급 원자력핵잠수함 등의 건조가 이년 이상 지체될 것으로 보임. 공군의 경우에도, F-35의 설계상 결함 때문에 그 구매량과 인도 시기가 축소되고 지연될 예정임⁸⁾

- 이런 군사력 조정을 군사력의 축소로 평가하기는 힘들. 재균형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은 지역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한 해·공군력의 신장에 주력하고 있음. 미국 공군은 전폭기, 스텔스 기능, 정찰감시 능력, 그리고 신형 폭격기의 개발에 매진할 계획이고, 해군은 52척의 함정을 태평양사령부 관할에 배치하고, 이 숫자를 점증시킬 계획임. 육군과 해병대의 병력 숫자는 축소되지만 66,000명의 육군과 3,400명의 해병대 병력이 이 지역에 상주할 예정임⁹⁾
- 주목할 점은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계획하에서 미국은 오래된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12척의 새 원자력핵잠수함, 100기의 신형 폭격기, 400개의 지상발사미사일 등에 배치할 핵무기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여기에는 향후 30년간 총 \$900b~\$1.1t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¹⁰⁾

○ 중국과 러시아, 일본의 행보도 주의를 요하는 상황임

- 중국의 경우 군사력 전개 능력을 최근 신장시키고 있음.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50,000톤급 랴오닝 항공모함의 취역 외에, 중국은 독자 개발한 항공모함의 취역을 추진하여 10년 내 항공모함을 수 척 수준으로 증가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음
- 중국은 진급(Jin-class) 원자력핵잠수함을 향후 8척 수준으로 증가시키는 한편, 차세대 잠수함은 사정거리가 신장된 신형 JL-2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장착하게 될 예정임. 또한 공격 원자력잠수함(nuclear-powered attack submarine)도 확대하여 현재 두 척인 상급(Shang-class) 잠수함 전력을 총 6척 규모로 증가시킬 것임¹¹⁾
- 공군력과 미사일 전력은 소위 반접근지역거부(A2AD)와 스텔스 능력의 신장과 아울러 정밀타격 능력과 방공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2018년 이후 실전배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의 5세대 전투기인 J-20은 기동성과 스텔스 능력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폭격기의 기능도 신장시켜 신형 순항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¹²⁾ J-20의 축소판으로 보이는 J-31은 중국이 개발한 두 번째 스텔스전투기로 함재기로 사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음¹³⁾
- 러시아 역시 최근에 신형 다탄두각개유도미사일 RS-24와 R-29RMU2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성공하였고 2020년까지 60기 규모의 5세대 T-50 스텔스전투기를 운영할 계획임¹⁴⁾

주목할 점은
미국은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핵무기
현대화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임.
그러한 계획하에서
미국은 오래된
핵탄두의 수명을
연장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12척의
새 원자력핵잠수함,
100기의 신형 폭격기,
400개의
지상발사미사일 등에
배치할 핵무기의
공급을 계획하고 있음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비록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은 아니지만
국가 간 (냉전적)
속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일본은 동중국해에서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무기체계의 도입을 추진함. 방위계획대강을 보면 일본은 유사시 도서지역을 방어하거나 탈환하는 데 필요한 틸트로터(tilt-rotor) 항공기와 수륙양용차, 그리고 감시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무인기와 정찰기의 능력을 보완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¹⁵⁾ 물론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미사일방어체계를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두 척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임.¹⁶⁾ 일본은 이미 2014년 9월 말부터 소위 헬기항모인 이즈모를 운용하는 해상 운용시험에 돌입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건조된 일본 군함 중 가장 큰 규모로 2015년 초에 취역하였음¹⁷⁾

3.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최근 국제정치 일반의 전개와 관련하여 현실주의이론은 과거의 적실성을 점차 상실하고 있다는 주장이 가능함¹⁸⁾
- 비록 최근 동아시아의 안보 현실은 비록 전통적 영토 중심의 갈등은 아니지만 국가 간 (냉전적) 속적 관계의 잔존과 해양분쟁의 촉발 가능성,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광범위한 수준에서의 지역체제적 균형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이뤄질 필요성을 만들어 내고 있음
- 소극적 평화의 반대로서 전쟁의 가능성에 대한 토론은 일찍이 전쟁 연구자들에 의해 공유되어온 “국가 또는 그에 준하는 정치적 단위체들이 상당한 기간 높은 수준의 무력을 사용한 행위”라는 전쟁 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전쟁과 평화에 대해 논의하여 온 현실주의이론의 맥락에서 토론되는 것이 적절할 것임¹⁹⁾

가. 세력균형이론과 동맹의 안보딜레마

- 세력균형이론에서는 국가는 영토보전과 주권유지로 상징되는 생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다른 목표들은 이런 생존을 위협하는 패권을 거부하기 위한 수단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파악함²⁰⁾
-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군사력의 질적·양적인 증강은 이미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으로 표면화되고 있어서 중국의 확장되는 전략적 이익 개념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회귀하는 미국과의 이해 충돌은 쉽사리 조정되기 힘든 문제 중 하나임²¹⁾
- 이에 미국은 예정된 국방비 삭감에도 불구하고 해군력의 감소는 최소화하겠다는 지침을 유지하면서 항공모함 11척 배치를 유지하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능력을 극복하기 위한 대비를 하고 있음. 또한 미국은

- 지역 내에서 기존 한국과 일본과의 군사협력과는 별도로 광범위한 방식으로 동맹국과 지역 내 파트너들과의 군사협력을 증진시키고 있음
- 이러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은 동시에 동맹의 안보딜레마 이슈를 발생시켜 새로운 불안 요인을 조성하고 있음.²³⁾ 동맹의 안보딜레마는 동맹 형성 이후에는 동맹 파트너에 대한 공약(commitment) 정도와 지원 이행 수준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생겨, 동맹에 얼마나 충실할 것인가라는 결정의 결과가 딜레마적인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임
 - 미국은 지역 내의 여러 국가와 동맹조약을 체결하여 유지해왔고, 이들 조약 내용 중 조약 당사자가 결부된 분쟁 발생시 미국의 의무적인 개입을 언급한 조항이 있음. 동맹조약 때문에 이들 국가가 중국 등 제3자와 영토적 분쟁에 결부된다면 미국으로서도 개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지역 내의 평화 유지가 역내 동맹국들과의 동맹조약과 병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
 - 따라서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미국은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동맹의 딜레마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이지만 촉발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게 될 것임
 - 동시에 중국 또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으로부터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자국의 군사력 현대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주변국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노력을 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는데, 중국의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보이듯이 미국의 행동이 양국에 동시에 압박으로 인식된다면 군사적 협력의 강화가 지속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음
 - 양국은 이미 2005년부터 상하이협력기구를 통해 정기적인 합동 군사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고 2013년에 전 세계 무기 수출량의 27%를 차지한 러시아 무기를 2번째(12%)로 많이 구매한 국가가 중국임. 2009년부터 2013년 사이 5년간 중국의 해외 무기 수입 중 러시아의 비중이 64%를 차지하였고, 2012년에 취득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 랴오닝호도 러시아로부터 수입하여 재정비된 것임
 -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양국 관계에는 실질적인 진전이 관찰됨. 2014년 5월 말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상하이를 방문한 자리에서 양국은 20년간의 장기 협상 끝에 30년간 4,000억 달러의 가스 사용에 관한 조치에 서명하였음. 또한 양국 해군은 동중국해 일원에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음. 또한 중국과 러시아의 공동 노력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BRICS 개발은행과 천 억 달러 규모의 적립기금 창설을 주도하였음²³⁾
 - 다만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동아시아 군사질서 즉 중장기적인 안정과

**세력균형론의 입장에서
미국은 당분간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균형을
유지하고자 노력할
것으로 전망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
동맹의 딜레마 문제는
여전히 부차적이지만
촉발적인 갈등의
단초로 남아있게
될 것임**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가능성,
즉 중국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존재함.
미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동중국해 해역 내
준비태세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임**

평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이론적 분파에 따라 다른 전망이 가능할 것임.
이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의 관점에 대한 논의 이후에 다시 설명함

나. 세력전이이론과 동아시아 군사력 균형

- 세력균형이론이 균형의 관점에서 동아시아의 안정과 평화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세력전이론은 보다 직접적으로 중국의 부상에 초점을 둔 논의가 가능함²⁴⁾
 - 세력전이론적 주장은 부상하는 중국이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중 간의 충돌 가능성과 국제정세의 불안정성에 대해 경고함
 - 세력전이론에 따르면 체제 내에서 부상하는 국가가 기존 질서에 불만족하고 선두 주자의 국력에 근접하면서 이를 추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여 무력충돌 가능성이 높아짐²⁵⁾
 -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본다면, 양국 간 전체적인 국력의 격차는 중국이 최근 20여 년간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유지함에 따라 급속도로 축소되었고 2020~30년대의 어느 시점, 경제력의 측면에서 중국이 미국을 추월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음
 - 군사력의 측면에서도 중국의 군사력이 지역 내에서는 미국에 필적할 수준을 구현할 가능성이 점차지고 있고, 특히 중국은 핵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전력투사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관건은 동아시아 및 세계의 현존 질서를 중국이 감내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인데, 한편에서는 이런 문제를 고려하여 미국은 중국이 대만 등의 핵심이익과 관련한 불만을 고조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함²⁶⁾
 - 한편,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이익의 충돌 가능성, 즉 중국의 불만이 고조될 가능성은 여러 곳에서 존재함. 미국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동중국해 해역 내 준비태세 강화를 포기할 수 없다면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미국 해군의 활동에 대해 중국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고조될 것임
 - 또한 2014년 웨스트포인트에서의 졸업식 연설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동맹국들의 방어를 미국의 ‘핵심적 이익(core interest)’에 포함시키면서 미국은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요구하는 경우 필요하다면 일방적으로 군사력을 사용할 것임을 강조했음. 그러한 경우란 미국민이 위협받고, 미국의 삶이 위협에 처하고,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라고 부연하였음. 미국 본토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현재 미국 동맹국들의 안보가 위협에 처하는 경우란 한반도와 동·남중국해에 해당되고, 따라서 미국과 중국의 양자관계에는 상당한 갈등적 상황이

전망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세력전이론의 가장 비관적 전망 중의 하나가 부상국 또는 기존 강대국이 예방전쟁의 유인을 강하게 가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 동아시아에서의 상황 전개와 관련하여 세력전이론이 가지는 함의는 실질적임
- 체제 수준에서의 세력전이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도 존재하고, 언제 누가 전쟁을 개시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력전이론 이론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하지만, 상식적으로 세력전이론에서 주목하는 갈등 전개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상황이라면 불안정성의 증가에 대한 우려는 커질 수밖에 없음²⁷⁾

다. 공격현실주의와 방어현실주의, 억지와 군비경쟁

- 신현실주의이론의 한 분파인 공격현실주의이론은 국가가 국제정치 무대에서 기회주의적으로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한다고 주장함
- 국가는 가능할 때(더 많은 권력을 추구할 기회가 있고, 그 권력을 추구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권력이 제공하는 이득이 더 클 때)는 항상 더 많은 권력을 추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다른 국가에 대해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임. 기본적으로 이러한 행동은 국제 무정부하에서 생존하기 위한 국가의 행동준칙임
- 이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동아시아의 경쟁 상황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으로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음
- 중국의 군사력 강화도 공격현실주의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중국의 핵심이익이 확장된 상황에서 중국은 그러한 이익을 지키기 위한 비용보다는 이익을 수호함으로써 생기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러한 행동을 위한 능력도 경제적·기술적으로 과거보다는 대폭 신장된 상황임
- 미어샤이머의 주장처럼 평화적인 중국의 부상은 불가능할 수 있음. 그 이유는 중국의 부상이 주변국들에게 위협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도 공격적인 방식으로 행동할 것이기 때문임. 현재 중국의 모습은 미국이 서반구의 지역패권국으로 부상할 때의 모습을 연상시키며, 중국은 그러한 부상을 자발적으로 포기하지는 않을 것임. 물론 중국이 동아시아의 지역패권을 장악한다면 그 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지 않으려 할 것이고,

비록 지역적인 세력전이가 관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국은 전략적 상황을 자국에 유리하게 유지하려는 능력과 의지를 보유함.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상대적 능력이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타국에 대해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볼 수 있음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국가들이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만을
추구한다는 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군사전략과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소위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나선형으로 고조되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안보딜레마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

이는 결국 양국 또는 세력 간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까지 예견해야 하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것이 미어샤이머의 견해임²⁸⁾

-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이런 비극적인 충돌을 방지할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음. 방어현실주의 관점에서는 모든 국가가 권력의 상대적 확장보다는 안보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원하지 않은 전쟁과 충돌을 회피할 수 있다고 판단함.²⁹⁾ 물리적 군사력 그 자체보다 군사력으로부터 파생되어 인식되는 위협의 정도에 집중하는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적국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군사력 그 자체가 야기하는 위협은 약화되는 것으로 판단함. 현 상황이 방어가 공격보다 유리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격을 유리하게 만드는 무기체계를조차도 정복을 용이하게 하여 선제행동의 이득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공격 우위의 장점이 뚜렷하지 않을 수 있음³⁰⁾
- 따라서 방어현실주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경쟁하는 국가들이 권력의 극대화가 아니라 안보만을 추구한다는 선한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군사전략과 준비태세를 유지한다면, 소위 작용-반작용의 과정을 거쳐 나선형으로 고조되는 군비경쟁과 국가 간 안보딜레마의 영향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임³¹⁾
- 반면, 앞에서 검토한 미국과 중국 등 동아시아 강대국들의 모습은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전략적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많은 수단들을 차용하고 있는 전형적인 안보딜레마적인 특징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음
- 현재 동아시아 주요국들은 거부적 억지와 징벌적 억지 양 차원의 군사적 능력의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는 집합적으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함
- 따라서 동아시아의 군사력 균형은 당분간 억지보다는 군비경쟁의 형태로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음. 특히 각국이 전략적 환경에 대한 평가와 군사력 현황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무기의 선택적 도입을 추진해 왔다는 점에서 당분간 체제적 수준에서 이러한 추이를 변화시킬만한 요인을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높음

4. 나오는 말

- 동아시아 각국이 억지 또는 균형의 차원에서 국방비를 지속적으로 투여하고 군사력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현 상황은 방어현실주의의 낙관적 전망을 약화시키고, 또한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의 차원에서 지적할 수 있는 역내의 불안정 요인을 증가시키고 있음
- 물론 현재의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강대국들이 참여하는 전쟁의

- 발발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을 것임. 그러나 이 시점에서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적 교훈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음
-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상황과 현 상황의 유사성은 다음과 같음: 잠재적 경쟁자의 급부상, 총력전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태도, 경제적·사회적·정치적 상호의존의 심화, 영토적 문제와 관련된 민족주의의 고양, 사전적 준비태세의 일환으로 주적에 최적화된 군사작전 개념의 수립, 동맹의 결속력 심화, 권력과 위신을 신속히 신장시키려는 기습적 조치의 유혹 등³²⁾
 - 양 시기의 차이점도 분명히 존재하여, 현재는 미국과 중국이 태평양으로 분리되어 있고, 양국의 정치적 이념과 제도가 상이하며, 군사력의 차이도 존재함. 또한, 미국 경제가 재원과 시장의 측면에서 중국에 보다 의존하는 양태이고, 지금은 핵무기가 포함된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가 유지되고 있음. 따라서 당장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이 전면적 형태로 촉발될 가능성에 대해 크게 평가하기는 힘들
 - 한편, 인류의 역사에서 있어서 전쟁은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왔고, 그 수행에 결부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은 각국의 군사적 고려에 큰 영향을 미쳐왔음
 - 특히 전쟁은 경쟁하는 둘 이상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각국의 행동에 다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준비를 의미하는 군사력의 건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³³⁾ 그런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논하기 위해서 전쟁원인론 중에 전쟁단계모델의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쟁단계모델(The Steps to War Model)은 영토분쟁의 유무, 분쟁관계 국가의 동맹 유무, 분쟁의 재발 여부, 상호 간 군비경쟁 여부 등 네 가지 변수가 해당 국가들 사이 전쟁 가능성에 단계적으로 결합하여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함³⁴⁾
 - 이 모델의 함의는 소위 ‘현실주의적 처방(realpolitik strategies)’의 비생산적 결과에 대한 경고에 있음. 강압적 위협, 군사력 증강, 동맹 등은 일반적으로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현실주의에서 이해하고 있지만, 이 모델에서는 그런 수단들이 오히려 전쟁 발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파악됨.
 - 모든 영토분쟁이 전쟁으로 귀결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전쟁으로 귀결되는 모든 영토분쟁에서 해당 국가들이 상기 현실주의적 대응을 했음이 관찰된다는 것임. 따라서 이 모델에서는 이런 관계를 “전쟁으로 가는 현실주의적 경로(realist road to war)”라고 명명함³⁵⁾
 - 결국 영토적 분쟁과 경쟁관계, 현실주의적 처방이 서로 상승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현실주의적 전략문화의 재생산에서

**전쟁은 경쟁하는
둘 이상 국가의
상호작용의 결과이고
각국의 행동에
다른 수준의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한다면
전쟁의 준비를
의미하는 군사력의
건설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그런 관점에서 군사력
균형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을 논하기 위해서
전쟁원인론 중에
전쟁단계모델의
함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탈피하여 보다 전쟁 회피적인 정책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이 모델의 함의임. 이 모델을 따른다면 현재 미국과 중국 양국 간의 적수적 관계의 심화는 일종의 전쟁단계에 답습하는 상황이고, 세력균형과 세력전이라는 보다 구조적인 요인의 영향 역시 그러한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음

- 급속한 세력전이 또는 안정적인 세력균형이 형성되지 않는 한, 동아시아의 평화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평화의 기반은 조금씩 잠식될 가능성이 큼. 결국 관련 국가들이 포괄 및 협력 안보의 시각에서 평화를 위한 공공재를 생산해내고 경제적·기타 상호의존의 심화를 통해 상호 간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반도 평화의 전망이 증대될 수 있을 것임
- 한국으로서는 지역 내에서 강대국 간의 전략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정부 간 및 다자 또는 국제적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동시에, 이러한 안보환경의 불안정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인식공동체의 구축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특히 각국 입장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불안정 요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전문가집단의 교류가 필요함

주석

- 1) 군사력 균형의 유효한 평가의 방식에 대해서는 단일한 합의가 없다고 볼 수 있고, 주관성이 반영될 수밖에 없음. 따라서 여기에서는 국방비를 중심으로 전쟁 수행 잠재능력과 무기체계의 변화를 표면적으로 관찰하는 한계가 있음을 미리 밝힘. 또한 평화는 동아시아 관련국들 사이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낮아지는 일종의 소극적 평화의 제한적인 개념을 지칭하는 것임을 아울러 밝힘.
- 2) Sam Perlo-Freeman and Carina Solmirano,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3"(April 2014a), p.1.
- 3)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4)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a), p.2.
- 5) 이런 제한은 제도적인 구속에 따라 생긴 것이 아니라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것임. 1987년의 이례적인 편성과 후쿠시마 사태 이후 2011년에 추가예산 때문에 1% 국방비 규모를 초과한 적은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오히려 예외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6) Sam Perlo-Freeman and Carina Solmirano, "Military Spending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SIPRI YEARBOOK 2014: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4b), p.192.
- 7) Siemon T. Wezeman and Pieter D. Wezeman, "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3"(March 2014), pp.2-3.

- 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p.50.
- 9)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verview—FY2014 Defense Budget Summary*,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3.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4/FY2014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10) “U.S. Ramping Up Major Renewal in Nuclear Arms,”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4).
- 11)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3), p.6.
- 12) Department of Defense(2013), p.35.
- 13) John Reed, “China’s Second Stealth Jet May be a Carrier Fighter,” *Foreign Policy—Situation Report* (March 11, 2013).
- 14) IISS(2013), pp.207-208.
- 15)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Dec. 17, 2013).
- 16) Perlo-Freeman and Solmirano(2014b), p.193.
- 17) “일본, 헬기항모 ‘이즈모’ 해상 시험 돌입: 내년 초 취역,” 『세계일보』, 2014년 10월 2일.
- 18) 이러한 주장은 고봉준,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평화학연구』 제14집 3호(2013a) 참조.
- 19) 이러한 정의는 우리 군에서 전쟁을 정의할 때 사용하고 있음.
- 20) 세력균형이론에 대한 토론은 대표적으로 Kenneth N. Waltz,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Summer 2000), pp.5-41 참조.
- 21) 고봉준,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재균형, 복합, 네트워크 정치,” 『민족연구』 53권(2013b), pp.89-90.
- 22) 동맹의 안보딜레마 개념에 대해서는 Glenn H. Snyder,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s,” *World Politics*, Vol.36, No.4(1984), pp.461-495 참조.
- 23) Yu Bin, “China-Russia Relations: Navigating through the Ukraine Storm,” *Comparative Connections* (September 2014), p.1.
- 24) 세력전이론에 대한 개략적 이해는 Jacek Kugler and Douglas Lemke,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sses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pp.129-63 참조.
- 25) Jack S. Levy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0), p.44.
- 26) 이러한 대표적인 견해로는 Steve Chan,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8) 참조.
- 27) 제1차 세계대전 전 독일이 러시아의 성장에 자극받아 전쟁이 발발했다는 주장.

- 이스라엘의 1981년 오시라크 공격,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공격 등과 관련된 주장이 이러한 전망과 궤를 같이 함.
- 28)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John J. Mearsheimer,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3, No.4(2010) 및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2014).
- 29) 대표적인 방어현실주의 주장에 대해서는 Robert Jervis,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January 1978) 참조.
- 30) 공수 우위에 대한 판단은 동일한 군사력을 지녔을 때 공격과 방어 중 어느 쪽이 우위를 지니는지와 비용 대비 효율 면에서 양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를 보고 판단할 수 있음. 이 중 전자는 단기적 안정성과 관련이 되어 있고, 후자는 군비경쟁에 영향을 미치게 됨. 즉, 저비스는 방어가 우세하면 특정 수준의 군사력으로 수렴되어 지나친 군비경쟁을 회피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군비경쟁이 촉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함.
- 31) 물론 방어현실주의에서 안보 추구 국가들 간의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님. 국내정치적 요인 또는 극단적인 오인에 의하여 안보 추구 국가들 사이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방어현실주의자들은 설명함.
- 32) Graham Allison, “Dont’ Worry, the Next World War is not upon Us...Yet,” *Defense One* (July 31, 2014).
- 33) 물론 전술한 역지모델의 측면에서는 군사력의 건설이 전쟁이 아니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함.
- 34) Paul D. Senese and John A. Vasquez, “Assessing the Steps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Issue 4(October 2005), pp.607-633.
- 35) Levy and Thompson(2010), p.61.

참고문헌

- 고봉준.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평화학연구』 제14집 3호(2013a).
- _____.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재균형, 복합, 네트워크 정치.” 『민족연구』 53권(2013b).
- Bin, Yu. “China-Russia Relations: Navigating through the Ukraine Storm.” *Comparative Connections* (September 2014).
- Chan, Steve. *China, the U.S. and the Power-Transition Theory: A Critique* (New York: Routledge, 2008).
- Department of Defense. *Annual Report to Congress: Military and Security Developments Involving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ashington, D.C.: Department of Defense, 2013).

-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2013*.
- Japanese Ministry of Defense. “National Defense Program Guidelines for FY 2014 and Beyond”(Dec. 17, 2013).
- Jervis, Robert. “Cooperation under the Security Dilemma.” *World Politics*, Vol.30, No.2(January 1978).
- Kugler, Jacek, and Douglas Lemke. “The Power Transition Research Program: Assess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Advances.” In Manus I. Midlarsky (ed.). *The Handbook of War Studies II*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0).
- Levy, Jack S., and William R. Thompson. *Causes of War* (Chichester, UK: Wiley-Blackwell, 2010).
- Mearsheimer, John J. “The Gathering Storm: China’s Challenge to U.S. Power in Asia.” *The Chines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Vol.3, No.4(2010).
- _____. “Can China Rise Peacefully?” *The National Interest* (October 25, 2014).
- Office of the Secretary of Defense Comptroller. *Overview—FY2014 Defense Budget Summary, Department of Defense*. April 2013. http://comptroller.defense.gov/Portals/45/Documents/defbudget/fy2014/FY2014_Budget_Request_Overview_Book.pdf
- Perlo-Freeman, Sam, and Carina Solmirano. “SIPRI Fact Sheet: Trends in World Military Expenditure, 2013”(April 2014a).
- _____. “Military Spending and Regional Security in the Asia-Pacific.” *SIPRI YEARBOOK 2014: Armaments, Disarmament and International Security* (2014b).
- Reed, John. “China’s Second Stealth Jet May be a Carrier Fighter.” *Foreign Policy—Situation Report* (March 11, 2013).
- Senese, Paul D., and John A. Vasquez. “Assessing the Steps to War.”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35, Issue 4(October 2005).
- Snyder, Glenn H. “The Security Dilemma in Alliance Politic.” *World Politics*, Vol.36, No.4(1984).
- Waltz, Kenneth N. “Structural Realism after the Cold War.” *International Security*, Vol.25, No.1(Summer 2000).
- Wezeman, Siemon T., and Pieter D. Wezeman. “SIPRI Fact Sheet: Trends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2013”(March 2014).
- “일본, 헬기항모 ‘이즈모’ 해상 시험 돌입: 내년 초 취역.” 『세계일보』(2014년 10월 2일).
- Allison, Graham. “Dont’ Worry, the Next World War is not upon Us…Yet.” *Defense One*(July 31, 2014).
- “U.S. Ramping Up Major Renewal in Nuclear Arms.” *New York Times* (September 21, 2014).

❖ 저자 약력

■ 고봉준

충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겸 평화안보대학원 군사학과장.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 후 미국 University of Notre Dame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음.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제주평화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함. 주요 연구 분야는 국제안보, 비확산, 군사전략, 미국외교안보정책 등이며. 최근 연구로는 “핵비확산과 네트워크 세계정치”, “동아시아 해양영토분쟁과 미국”, “동아시아 망제정치: 21세기 미국의 군사안보 네트워크 전략”, “핵전략” 등이 있음. bjko@cnu.ac.kr

한반도 주변에 전개되는 위험요소의 종류와 정책적 대안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목 차

1. 들어가는 말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분석의 결과
 -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4. 결론

1. 들어가는 말

- 새롭게 등장하는 안보 패러다임은 전통안보와 비전통안보의 통합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안보의 위험요인을 입체적으로 인식하려는 필요성이 부상
 -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의 개념은 전쟁, 무력도발, 국지분쟁과 같은 전통적인 안보(conventional security)개념에서 자연재해와 재난위기, 국가의 핵심기반의 위기, 국민생활안전의 위기를 포함하는 확대된 개념
 - 포괄적 안보의 대상으로 고려되는 재난, 질병, 환경, 마약, 인신매매,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등 다양한 분야를 단편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맥락에서 논의를 전개하고 사회의 불균형적 발전과 그에 따른 불협화음과 무질서 상태의 사회는 국가의 안보에 위험요인으로 인식
- 안보패러다임의 변화로 사회·문화 영역에서 기인하는 안보 영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요 과제
 - 21세기의 국제질서는 복합적 네트워크질서와 국제화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안보개념의 적용이 필요함
 - 한국사회의 발전은 국제화와 통일시대라는 국제질서의 변화와 이에 따른 지리적 영역의 한반도로 확대가 필요한 시점
 - 새로운 차원의 안보위협으로 논의되는 사이버 범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에너지 및 식량안보, 환경 문제, 실패한 국가의 인권 문제 등의 원인은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의 불균형, 부조화, 불합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 주목
 - 대외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부터 국가의 핵심이익을 추구하는 대안으로 적극적으로 국제화·세계화를 추진해왔고, 발전된 국가위상에 부응하여 국제화의 조류가 자연스럽게 확대되면서 21세기를 맞이하여 그 성과가 외교·안보, 경제, 그리고 사회·문화 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나타나고 있음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는가?
한반도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문화 분야에
안보위협
의 본질은
무엇인가?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안보위협
의 상호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국제화의 성공적 수행으로 인한 국익의 다면화라는 긍정적 효과의 이면에는 그림자처럼 부정적 효과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위협요소들을 방지할 경우 국익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비전통적 안보 분야에서의 위기가 전통적 안보 영역에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포괄적 안보가 중시되는 21세기 국제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입지와 위상을 고려할 때, 한국이 포함되는 포괄적 의미에서 한반도의 사회·문화 영역에서 제기되는 안보위협을 국내외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다음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 안보 문제에 있어서 사회·문화 분야의 중요성은 증가하는가?
 - 한반도가 경험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사회·문화 분야에 안보위협
의 본질은 무엇인가?
 - 한반도가 가지고 있는 사회·문화 분야에서 안보위협
의 상호관계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 끝으로 앞의 논의에 근거해서 한반도가 경험하는 사회·문화 분야의 안보위협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 지리적으로 확대된 한반도의 비전통안보 분야의 위협의 중점을 사회·문화 영역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사회·문화적 위협요인을 기원에 따라 분류
 - 1) 국내에 내재화된 대내적 위협요인, 2) 우리 사회의 외부에서 기인하는 대외적 위협요인, 그리고 3) 남북한 통일에 따라 한반도에 나타날 통일통합의 위협요인으로 나누어 각 분야의 구체적인 위협요인을 조사하고 분석
 - 안보위협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계열적 변화를 고려하여 국내에 내재화된 위협요인을 과거로부터 지속되는 위협요인으로, 우리 사회의 대외적인 환경에서 기인하는 위협요인을 현재에 발생하여 지속되는 위협요인으로 그리고 통일한국에 나타날 국가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협요인을 미래의 위협요인으로 연계하여 과학적으로 이해
- 대내적, 대외적, 그리고 통일통합의 위협요인은 각각 아래의 요소들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함
 - 위의 논의과정에서 과거부터 상존해온 대내적 위협요인은 (1) 이념갈등,

- (2) 지역갈등, (3) 계층갈등으로 구성
- 현재 시점에서 세계화와 국제화를 통해 한국사회가 국제사회와 교류와 협력이 증가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대외적 위협요인은 (1) 다문화통합, (2) 사이버 범죄, (3) 국제범죄·테러위협, (4) 협한류의 확산으로 구성
- 미래에 남북한의 통일을 추진함에 따라 한반도에 등장할 통일국가에서 국가의 통일과 사회의 통합과정에 나타나게 될 위협요인은 (1) 기회균등, (2) 시장경제통합, (3) 문화이질성으로 구성
- 대내, 대외, 통합의 위협요인을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계열적으로 고려하면 대내적 위협요인은 과거에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해왔고, 대외적 위협요인은 현재 위협요소로 부상하여 사회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현실을 아래의 <표 1>에 보여줌

<표 1> 위협요소의 시계열별 분포

		시점			
		과거	현재	미래	
위협 원인	대내위험요인	1. 이념갈등	-----	----->	
		2. 지역갈등	-----	----->	
		3. 계층갈등	-----	----->	
	대외위험요인	1. 다문화통합		-----	----->
		2. 사이버 범죄		-----	----->
		3. 국제범죄·테러위협		-----	----->
		4. 협한류 확산		-----	----->
	통일위험요인	1. 기회균등			----->
		2. 시장경제통합			----->
3. 문화이질성				----->	

과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내적 위협요인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다문화사회에서 그리고 통일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요인이다...

- 대내, 대외, 통일의 위협요인은 발생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상응한다고 할 수 있지만, 해결과제라는 관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과거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 대내적 위협요인도 특별한 정책적 노력이 경주되지 않는다면, 미래의 한반도 안보에 있어 이념갈등, 지역갈등, 빈부갈등은 다문화사회에서 그리고 통일사회에서도 여전히 상존하는 위협요인임
- 통일에 따른 위협요인은 미래의 시점에 중요한 위협요인으로 작용
- 현재 시점에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한 대외적 위협요인도 미래 시점에는 통일통합으로 인한 사회적 위협요인과 혼재하게 되면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기인하는 위협요인이 한반도 안보에 승수효과를 가지면서 위협의 정도가 확대

**국내 전문가
평가(3.41)가
해외 전문가
평가(3.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다**

- 통계사항은 다음과 같음
 - 사회·문화 영역에서 위협요소에 대한 이론적 배경 아래 실시된 설문 조사를 통해 국내 전문가들의 경우 179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12건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167명의 응답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 25명이 응답을 하였으나 이 중에 몇몇 문항에 응답을 하지 않은 설문결과가 2건이 있어서 이를 제외하고 23명의 응답 결과만을 이용하여 분석

3. 분석의 결과

가. 기술통계: 공간이론

- 분석에 이용된 3개 분야 10가지 위협요소에 대한 평가를 기술통계를 통해서 설명하면 아래의 <표 2>와 같음

<표 2> 국내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4.15	0.78	2	5	57	87	15	8	0
2. 지역갈등	4.04	0.71	2	5	38	105	17	7	0
3. 계층갈등	3.73	0.78	2	5	21	94	38	14	0
4. 다문화통합	2.75	0.89	1	5	4	31	60	64	8
5. 사이버 범죄	3.59	0.83	2	5	18	84	45	20	0
6. 국제범죄·테러	2.69	0.86	1	5	3	29	56	72	7
7. 혐한류	2.75	0.81	1	5	1	33	61	67	4
8. 기회균등	3.59	0.96	1	5	19	94	26	23	5
9. 시장경제통합	3.22	1.09	1	5	18	60	39	42	8
10. 문화이질성	3.56	0.97	1	5	25	75	39	25	3

- 국내 전문가들과 해외 전문가들의 표본의 크기가 167명과 23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위협요인의 평가에 있어서 국내 전문가 평가(3.41)가 해외 전문가 평가(3.12)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양한 위협에 대한 반응에 유사점과 함께 차이점도 보여주고 있음
- 국내 전문가들은 과거로부터 존재해오던 사회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전체 위협요소 중에서 이념갈등(4.15), 지역갈등(4.04),

- 그리고 계층갈등(3.73)을 가장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현재의 위협 중에서 협한류(2.75)와 다문화통합(2.75)을 가장 통제 가능한 위협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반면 사이버 범죄 위협(3.59)을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최근에 나타나는 피싱, 스미싱, 해킹과 같은 다양한 사이버 범죄의 증가 경향에 대한 반응이라고 평가
 - 통일에 따른 미래의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는 기회균등(3.59), 문화이질성(3.56), 그리고 시장경제통합(3.22)의 순으로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미래의 통일위협요인은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협요인보다는 덜 위협적이지만 현재의 대외위협요인보다는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표준편차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국내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보다 작은 반면에 해외 전문가들의 표준편차는 1.0을 넘어서고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1.5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의 편차가 더 크게 나타나며 그 결과는 아래의 <표 3>과 같음

<표 3> 해외 전문가의 한반도 사회·문화 위협요인에 대한 평가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빈도분포				
					5	4	3	2	1
1. 이념갈등	3.43	1.19	2	5	6	5	5	7	0
2. 지역갈등	3.21	1.31	1	5	4	9	2	7	2
3. 계층갈등	3.34	1.15	1	5	3	10	3	6	1
4. 다문화통합	2.69	1.36	1	5	3	4	4	7	5
5. 사이버 범죄	3.13	1.17	1	5	3	6	7	5	2
6. 국제범죄·테러	2.65	1.15	1	5	1	6	3	10	3
7. 협한류	2.69	1.10	1	5	1	5	6	8	3
8. 기회균등	3.65	1.26	1	5	7	8	2	5	1
9. 시장경제통합	3.30	1.39	1	5	6	5	5	4	3
10. 문화이질성	3.13	1.51	1	5	6	5	2	6	4

**해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 중에
통일위협요인과
대내위협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외위협요인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한다**

- 해외 전문가들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 중에 통일위협요인과 대내위협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평가하는 반면 대외위협요인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
- 전체 위험요소 중에서 현재 위험요소에 해당 하는 대외위협요인에 속 하는 국제범죄와 테러의 위협(2.65)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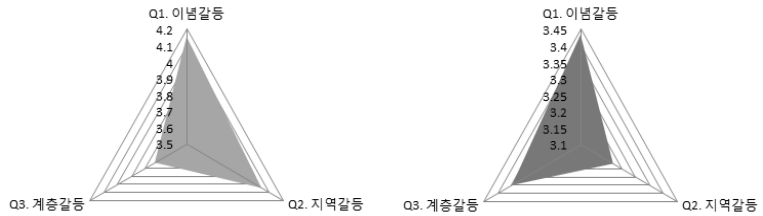
**대내외험요인에 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갈등(4.04)을
계층갈등(3.73)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3.34)을
지역갈등(3.21)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한다**

다음이 다문화통합(2.69)과 혐한류(2.69)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사이버 범죄의 위협(3.13)으로 조사되었지만 다른 위험요인들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통일위험요인에 포함되는 문화이질성(3.13)을 포함하여 대내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을 상대적으로 심각한 것으로 해외 전문가들은 평가함
- 대내위험요인에 있어 국내 전문가들이 지역갈등(4.04)을 계층갈등(3.73)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3.34)을 지역갈등(3.21)보다 높은 위험요인으로 평가
-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지역갈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사회·문화적 갈등이 계층 간의 상대적 박탈감에서 기인한다는 일반적 추론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평가

- 이러한 차이는 아래의 <그림 1>과 <그림 2>에 지역갈등과 계층갈등의 면적의 차이로 잘 나타나있고 현재의 위험요인인 대외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는 일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대내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2> 대내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해외 전문가들도 사이버 범죄(3.13)를 가장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혐한류(2.69), 다문화통합(2.69), 그리고 국제범죄와 테러(2.65)는 유사하게 위험도가 가장 낮은 요인으로 평가

- 대외위험요인은 아래의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음

<그림 3> 대외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4> 대외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 대외위협요인의 분포의 양상은 뚜렷하게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는 상대적으로 덜 위협적인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 다만 사이버 범죄의 위협에 대해 국내 전문가의 평가(3.59)가 해외 전문가의 평가(3.13)에 비해서 좀 더 높게 나타남
 - 한국사회에 사이버 범죄의 증가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국제 범죄와 테러는 새롭고 부상하는 초국가적 위협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국제테러조직에 의한 테러의 발생가능성이 매우 낮음¹⁾
 - 국제범죄의 심각성도 마약밀수 수준에 그치며 발생빈도가 높지 않다는 특성을 가지며 테러조직, 범죄조직, 마약조직의 연계 가능성도 사실상 낮고, 국내에 국가의 법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조직범죄 조직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주변국인 중국, 일본, 러시아의 범죄조직과 연계된 범죄행위 역시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²⁾
 - 대외위협요인은 국내 전문가와 해외 전문가의 응답에 별다른 차이가 없이 사이버 범죄를 가장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다문화통합에 대해서는 국내 전문가(2.75)평가가 해외 전문가(2.69)평가보다 조금 높게 나옴
 - 이러한 평가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으로 다문화에 대한 경험이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국제범죄와 테러에 대한 평가는 국내(2.69)와 해외(2.65) 전문가들의 평가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경우에도 국내의 평가가 해외보다 조금 높게 나온 것은 범죄와 위협에 대한 직접 당사자가 느끼는 위협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님
 - 한류의 부정적인 영향의 확산을 의미하는 혐한류의 확산은 국내 전문가(2.75)의 평가가 해외 전문가(2.69)의 평가보다 높게 나옴 한류에 대한 평가의 결과는 다문화통합에 대한 평가와 일치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한국사회가 한류의 확산으로 인한 일반적 기대의 상승, 국민으로서 자긍심 고취, 국격의 상승, 경제적 파생효과에 따른 반사이익과 같은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이를 유지 및 확대하는 데 대한 전략적 부담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에 반해서 해외 전문가들의 경우는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에서 보다 원만한 평가를 제시한 결과로 보임
- 미래의 위협요인에 해당하는 통일위협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도 국내와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에 상당히 차별화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기회균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3.59)와 해외(3.65) 전문가들이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함

**통일 이후 남북한
주민들이 경험하게 될
기회균등의 위협에
대해서는
국내(3.59)와
해외(3.65)
전문가들이
유사한 평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외 전문가들이
좀 더 심각하게
평가한다**

기회균등의 문제나
시장경제로의
통합의 문제는
분단의 시기 동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사회주의경제의
독재체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된다

- 시장경제통합과정에 발생하는 위험요인에 있어서는 국내 전문가(3.22)보다 해외 전문가(3.3)의 평가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기회균등과 시장경제통합과 같은 사회제도의 문제에 있어서 해외 전문가가 국내 전문가보다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남

〈그림 5〉 통일위험요인 국내 전문가 응답 〈그림 6〉 통일위험요인 해외 전문가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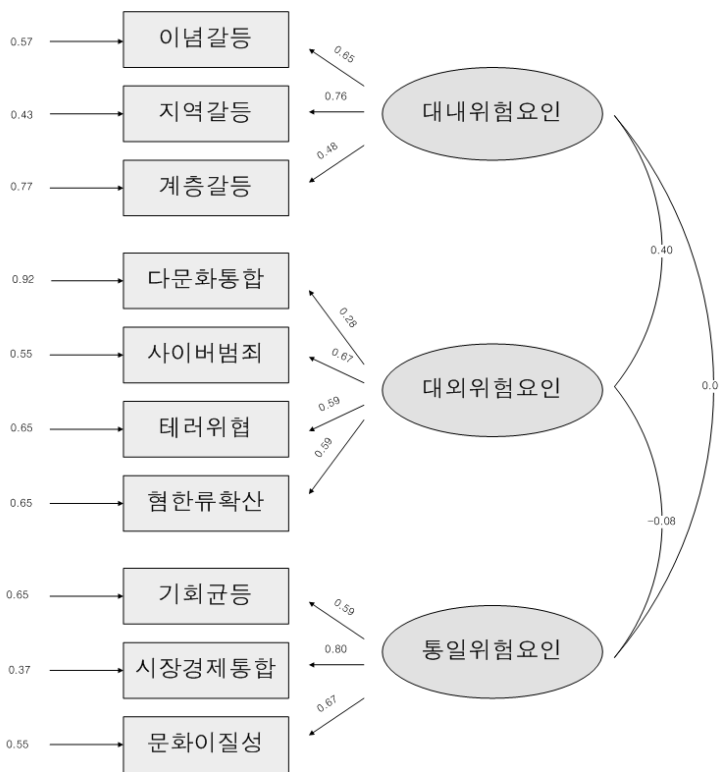
- 이에 반해서 문화이질성의 위험에 대해서는 해외 전문가(3.13)보다 국내 전문가(3.56)의 평가가 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이질성에 있어서 엇갈리는 평가는 외부인 효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해외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남한이나 북한이나 한반도에서 상당기간 같이 살아온 같은 민족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문화적 이질성은 심각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임. 이에 반해서 기회균등의 문제나 시장경제로의 통합의 문제는 분단의 시기 동안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온 사회주의경제의 독재체제와 시장경제의 민주주의체제의 차이점을 극복하는 것이 더 어려운 과제로 평가됨

나. 분석통계: 구조방정식 모델

- 구조방정식모델은 잠재변수와 측정변수 사이의 관계 및 방향을 연구자가 사전에 가설로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분석을 실시
 - 잠재변수는 구체적으로 관측되지 않지만 이론적 논의를 통해서 개념적으로 수립된 추상적 개념을 의미
 - 재변수를 측정하기 위해 관측변수를 개발하고 잠재변수들 간의 관계를 기존의 이론에 기초하여 가설화
- 국내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관측변수가 잠재변수에 대한 요인부하 값이 전체적으로 양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중요한 것은 잠재변수에 관련된 관측변수의 요인부하 값인데, 대내위험요인의 경우 국내 전문가들의 반응은 지역갈등 0.76, 이념갈등 0.65, 그리고 계층갈등 0.48의 순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대내위험요인이라는 잠재적인 개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를 지역갈등, 이념갈등, 계층갈등의 순서로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

- 잠재변수인 대외위험요인에 대해서는 사이버 범죄 0.67,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은 모두 0.59, 그리고 다문화통합은 0.28로 각각 나타남.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대외 위험요인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중요도의 순서로 사이버 범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으로 국제범죄와 테러위험과 혐한류가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며, 다문화통합은 가장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이 결과는 최근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경각심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7〉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국내 전문가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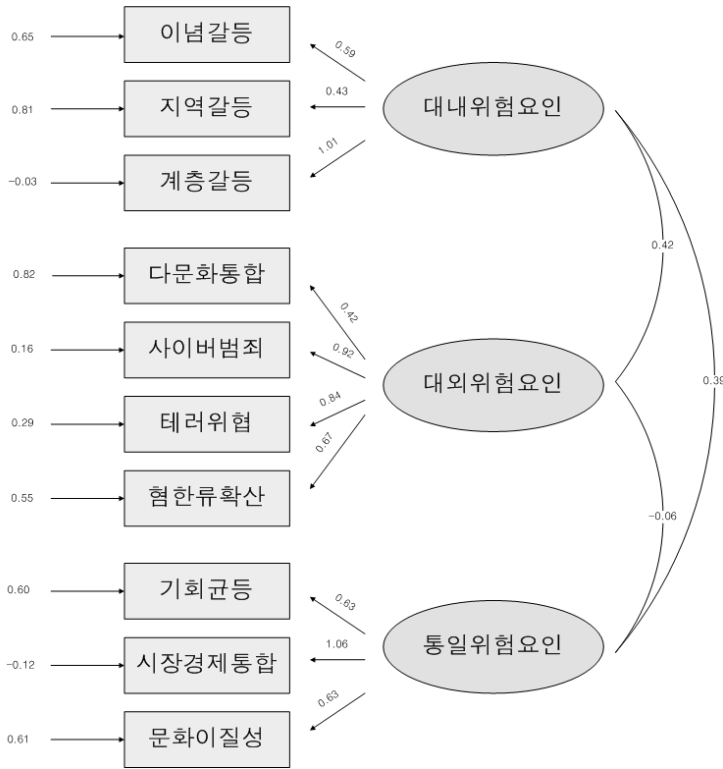
**사회·문화 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수준판단에 있어서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의미하며 그 뒤를 잇는
지역갈등이
한국 정치과정에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 마지막 잠재변수인 통일위험요인에 대한 결과는 시장경제통합 0.8, 문화이질성 0.67, 기회균등 0.59로 나타남. 이 결과는 통일 한반도가 형성 되었을 때, 시장경제통합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그 다음으로 문화적 이질성의 극복과 기회균등의 문제가 뒤를 잇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
- 사회·문화 영역 한반도 위험요소 수준판단에 있어서 시장경제로의 통합이 가장 어려운 과제를 의미하며 그 뒤를 잇는 지역갈등이 한국 정치과정에 전통적으로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국제화를 통한 대외적
요인이 부가되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합국가가 형성되어도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 잠재변수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상호 양의 상관관계(0.4)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과거로부터 상존하는 대내위험요인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위험요인도 전자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양의 상관관계(0.01)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반해서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과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위험요인은 음의 상관관계(-0.08)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내위험요인과 대외위험요인을 서로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의미, 다시 말해서 대내위험요인인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은 현재 시점에 새롭게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인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할 것을 의미함
 - 마찬가지로 현재의 대내위험요인은 통일 한반도의 미래사회에 나타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의 이질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영향이 상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이 결과는 한국사회가 전통적인 사회구조에서 국제화를 통한 대외적 요인이 부가되고 통일을 통한 새로운 통합국가가 형성되어도 이념갈등, 지역갈등, 계층갈등으로부터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여, 현재 시점에 부상한 대외위험요인은 다문화통합, 사이버 범죄, 국제범죄와 테러위험, 그리고 혐한류의 확산과 같이 전통적인 한국사회에 존재하지 않던 위험요인들이지만 이러한 위험요소들에 대한 사회적 적응은 미래의 통일 한반도에 부각하게 될 통일위험요인인 기회균등, 시장경제통합,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힘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함
 - 실제로 통일위험요인에 속하는 문화이질성과 대외위험요인에 속하는 다문화통합은 유사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의 공통점은, 한국이 아시아의 다양한 인종이 유입되면서 형성되는 다인종·다문화사회의 과정과 통일과정을 통해서 북한 주민과 동일한 사회통합을 이루는 과정을 유사한 과정으로 인식
- 해외 전문가들의 응답에 대한 구조방정식 모델에 따르면 상관관계의 크기와 방향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결과와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 별도의 논의는 하지 않고 표만 제시함

〈그림 8〉 사회·문화 영역 위험요소 구조방정식 모델(해외 전문가 설문조사)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한다

4. 결론

- 한반도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요소 10가지를 확정하여 이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설문조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안보 문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할 수 있는 연구 성과를 몇 가지로 정리하고 그 한계점과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론에 가음
- 첫째, 분석결과 사회·문화 영역에서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한반도 위험요소로 전통적인 지역갈등, 그리고 현재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사이버 범죄의 급증, 그리고 미래 통일한국에 나타날 시장경제로의 효과적인 통합
- 둘째,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의 안보위험요소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인식에 큰 차이가 존재하기보다는 공통점이 더 많이 존재
-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의 차이는 국내 전문가들은 지역갈등을 해외 전문가들은 계층갈등을 높은 위험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제외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사이버 범죄와 통일 이후 시장경제로의 통합을 주요한 위험요인으로 인식

민족주의가 제도화의**단계에 들어가면****시민사회 내부에****다양한 이익집단이****형성되는데 이들 집단****사이의 경쟁에 의해****국가정책이 결정되는****다원주의(pluralism)****사회가 정치적, 사회적,****문화적 소수자의 갈등을****최소화하는 제도적****장치이며 원칙적으로****권력은 국가 내의****다양한 사람과****집단들에게 골고루****분산되어 있어서****소수에 의한 지배가****가능할 때, 사회적****위험요인이 감소한다**

-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가지는 요인으로 대외위험요인과 통일위험요인은 문제를 서로 악화시키기보다는 완화시키는 관계에 있음에 반해서, 전통적으로 존재해오던 대내적 위험요인은 현재의 국제화와 다문화사회에서 오는 위험과 통일 한반도의 통일국가에도 여전히 상존하면서 다른 문제들과 복합적으로 작용

○ 한반도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에 대한 정책 대안은 장·단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

- 장기적 정책적 대응은 다원주의의 열린사회로의 발전이 장기적인 대안으로 한국사회가 직면해왔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핵심은 정치적 소수자의 형성과 관련

- 기존의 정치적 소수자가 지역, 이념, 소득에 의해서 구분되었다면 현재의 위험요소를 구성하는 정치적 소수자는 해외 이주민과 문화적 소수자 그리고 미래의 정치적 소수자는 통일로 인해 생겨나는 북한 주민들이 될 수 있음

- 민주주의가 제도화의 단계에 들어가면 시민사회 내부에 다양한 이익집단이 형성되는데 이들 집단 사이의 경쟁에 의해 국가정책이 결정되는 다원주의(pluralism) 사회가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의 갈등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원칙적으로 권력은 국가 내의 다양한 사람과 집단들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어서 소수에 의한 지배가 가능할 때, 사회적 위험요인이 감소

- 다원주의 사회의 지향을 통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감소시키려는 노력을 경주하는 과정에 다원주의사회가 가지는 취약점으로 권력을 사실상 다양한 집단이 공유하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비판도 있지만, 사회집단이 다양한 축으로 구분되는 만큼 중복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구성원이 증가함으로써 사회갈등의 요소가 감소하게 되는 점에 주목할 필요

- 개인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다원주의적 사회제도가 잘 운영된다면 개인의 의사가 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완성되며 이를 통해서 사회적 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사회·문화 영역에서 한반도 위험요소를 감소시키는 방안은 국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줄이고 시민사회의 활성화를 추구

- 사회·문화적 위험요소의 단기적인 원인은 소수자들이 느끼는 사회적 불평등에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은 국가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정책 개발의 필요

- 기존의 사회·문화적 위험요소로 평가되었던 계층, 지역, 이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에 추가하여 해외이주민과 탈북자를 배려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을 구축 및 재정비하는 것은 사회·문화 영역의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대안

- 사회보장이라는 용어자체가 서구에서 처음 생겨날 때, 사회적인 불안을 없게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만 현재에 와서는 사회적 불안을 소극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불안을 제거하고 예방하는 접근이 필요함
- 한반도에서 새롭게 형성되는 사회구성원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종류의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책적 대안의 마련이 사회·문화적 불안요인을 해소하는 대안이 될 것임

주석

- 1) 조성권, “초국가적 위협: 테러, 마약, 범죄조직의 상호연계,” 『JPI정책포럼』 No. 2012-12(제주: 제주평화연구원, 2012), p.11.
- 2) 위의 글, pp.10-11.

❖ 저자 약력

■ 이성우

現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국제정치학회가 주관하는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의 Referee로 활동한 바 있음. 저서로는 『2011 한국인의 평화관: 통일정책과 여론』 및 『2010 한국인의 평화관: 외교정책과 여론』 등이 있음.

목 차

1.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2. '동북아시대'의 도래
3.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4.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5.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장애물
6. 남북관계 개선의 적절한
노선
7.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동북아 지역협력과 북한 문제

이수훈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1.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기

- 동북아는 지정학적 이행기에 접어들어 거대한 위기를 맞음
 - 동북아 역내 미국 헤게모니가 퇴조하고 이에 병행적으로 중국이 급부상하고 있음
 -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따라 형성된 '샌프란시스코 체제'라 불리는 미국 주도적 지역질서가 도전과 변화에 직면함. 이에 따라 영토, 역사, 영공, 동맹 등의 이슈들이 등장하여 갈등과 불안정을 야기함. 미국 주도형 지역질서가 무너지고 대안적 지역질서가 구축되어야 할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시공간으로 진입
 - 일본의 우경화 흐름과 부합하여 '평화국가'로부터 '보통국가'로의 국가성격 변화가 눈에 띄는 현상임
 - 더불어 퇴조하는 헤게모니권력인 미국과 부상하는 신흥권력 중국 간의 격렬한 권력경쟁 표출
 - 동북아는 '중첩적 시간대', 즉 미국의 시대로 보기에는 뒤늦은 감이 있으나, 중국의 시대라고 하기에는 이른 시간대에 진입
 - 한국이 동맹국인 미국과 협력동반자인 중국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답론 등장 자체가 바로 이 시간대임을 입증
 - 북핵 문제도 이런 각도에서 조망할 수 있는 성격을 갖추고 있음. 즉, 북한은 매우 유동적인 정세 속에서 자신의 생존과 정체성을 이어가기 위해 때로는 협상 카드, 때로는 무력 수단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음

2. '동북아시대'의 도래

- 기회로서의 동북아시대
 - 동북아 지역이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의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미국·유럽 등과 더불어 세계경제의 한 축이 형성되었고, 지리적으로 그 가운데 한국이 자리잡고 있음

- 한국이 금융·운송·산업클러스터 등의 분야에서 허브(hub)국가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잠재성을 높여줌
 -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과 시장에 편승해 부(富)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맞고 있음
- 도전으로서의 동북아시대
- 미국과 중국 간의 격렬한 권력경쟁 양상의 전개로 인해 동북아 구도 자체가 불안정을 내포함
 - 정치·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일본의 우경화, 중국의 공세적 대응(영토 및 주권을 ‘핵심이익’으로 규정)이 맞물려 영토, 역사, 영공을 두고 갈등과 충돌이 표출되고 있음
 - 글로벌 강대국들이 자신의 존재감을 관철시키고자 하면서 분단된 한반도는 상대적으로 전략적 취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음

3. 참여정부의 ‘동북아시대’ 구상

- 구상의 기본 내용
- ‘동북아시대 구상’은 바로 도전으로서의 동북아시대에 대한 대책으로서 동북아에 협력을 확대·심화시키고 제도화하여 공존·공영의 질서를 만들자는 비전이자 국가전략
 -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어디에 기댈 것인가를 놓고 편을 갈라 싸우는 것(‘변방의 역사’)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자는 구상
 -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위한 협력 구상으로서 경제 분야, 정치안보 분야, 사회문화 분야 등을 포괄
 - 자주국방, 균형외교, 남북간 평화번영 정책을 통하여 역량 제고
- 현주소
- 이 구상은 대외환경적으로 북핵 문제, 중국과의 동북공정 갈등, 일본과의 영토 및 역사 갈등으로 인해 애로를 겪었음
 - 국내적으로 정치적 반대, 미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반대, 친중노선이 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난관에 부딪힘

4.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 구상의 기본 내용
- 동북아 지역에서 화해와 협력의 역내질서를 정착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출발, 따라서 ‘동북아시대 구상’과 취지가 동일함

- 역내 국가 간 경제적 상호의존 증가와 협력 확대에도 불구하고 정치안보 분야에서의 갈등과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아시아 패러독스’의 극복 방안 제시
- 신뢰 위기에 직면한 동북아 딜레마를 풀어나가기 위해 협력과 대화의 습관 및 관행을 축적, 신뢰의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포부
- 환경, 재난, 기후변화, 핵안보 등 연성안보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차 다른 분야로 전이 및 확산해간다는 추진 방식

○ 현주소

- 이렇다 할 가시적 성과 없이 담론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 남북관계 개선 없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없음. 결국 북한을 우회할 수 없는 현실
- 경색된 한일관계와 신뢰가 부족한 한러관계 등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 러시아에서 5월에 개최되는 2차대전 전승기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이 실리를 취하는 방법임. 특히 ‘유라시아 구상’을 펼치겠다는 차원에서도 러시아와의 파트너십 구축이 긴요함

5. 북한 문제라는 거대한 장애물

○ 북핵 문제는 동북아 질서의 최대 위협 요인

- 1993년, 북한이 NPT를 탈퇴하면서 북핵 문제가 공식 발발한 지 20년이 넘었음. 그동안 북한은 세 차례나 핵실험을 감행하였고, 현재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음. 국제사회가 공식 인정하지 않을 뿐 북한은 사실상 핵무기 보유국임. 심지어 북한은 미국 대륙까지 공격 가능한 탄도미사일도 보유하고 있음. 북한의 주장대로 핵실험에서 핵폭탄의 경량화 및 소량화에 성공하였다면 핵무기를 장거리미사일에 탑재하여 미국 본토도 공격 가능
- 현재 동북아 지역질서에서 북핵 문제를 가장 심각한 도전 요소로 볼 수 있음.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동북아 평화질서를 만들 수 없음
- 북핵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북미 간 적대관계 청산 불가능. 북일관계도 정상화 불가능. 중국도 북한에 대해 진심으로 달가울 수 없음

○ 북핵무기에 대한 군사기술적 대응책의 문제점

- 핵무기는 ‘절대무기’로서 다른 수단으로 방어하기가 불가능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미사일을 갖고 요격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이상론임
- 우리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취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협력’ 약정(2014년 12월)은 여러 부작용 야기

-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정책의 최첨단에 한국이 나선다는 의미에서 심각한 사안임

○ 비핵화, 불가능하지 않은 과제

- 북핵 문제 해결의 청사진은 2005년 9월에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공동성명’, 따라서 어떻게든 6자회담을 재개하여 9.19공동성명의 합의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
- 9.19공동성명에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북미 및 북일 관계 정상화,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 수립이라는 5개의 과제들이 포괄적이고도 상호 조율된 방법으로 이행되도록 규정
- 다른 과제들과 상호 조율된 방식으로 동북아 평화안보 메커니즘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사고의 유연성, 지속적인 대화, 상호 신뢰구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9.19 정신’을 발휘해야 함
- 조속히 2007년 2월의 ‘2.13이행합의’로 돌아가 단계적 접근을 통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협상하는 것이 필요함
- 6자회담의 장기 교착상태를 풀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한국이 창의적이고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만 공동 보조를 취하게 되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어려움. 북핵 문제 해결을 중국에게 떠넘기는 것도 현명한 대응이 아님. 이는 결국 중국의 입지만 키워 중국의 동북아 역내 영향력 확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 불량국가, 실제와 인식

- 북한과 이란, 이라크 등 3국을 대량파괴무기를 개발하려는 ‘악의 축’으로 규정한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발언(2002년 1월 29일)을 계기로 미국을 위시한 서방세계의 북한에 대한 인식이 악화일로할 걷기 시작. 이 발언은 ‘9.11사태’ 이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핵심 대외전략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 북한은 대화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압박과 제재를 가해 제거해야 할 집단으로 위상이 매겨짐. 북한은 ‘테러지원국’으로 분류되어 실제로 상당한 제재를 받음
- 2002년 10월에 불거진 제2차 북핵위기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발발하였고, 이후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일대 험로를 걷게 됨. 이는 노무현 정부 내내 대북정책 및 동북아 지역정책의 걸림돌로 작용
- 이와 더불어 북한 인권이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사회의 일반적 인식이 악화
-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 사망과 연이은 김정은의 3대 세습으로 인해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욱 강화됨

6. 남북관계 개선의 적절한 노선

- 교섭(engagement)정책 이외의 대안을 찾기 어려움
 - 10년가량 시행한 교섭정책은 대내·외적 제약요인들로 인해 실질적 진전을 거두지 못했지만,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화해협력 단계를 개시했다는 의미가 있음
 - ‘피주기(약 1조 원 정도 대북 지원)’, ‘잃어버린 10년’ 등은 보수파의 정치 논리이자 담론이었을 뿐, 실용적 대안이 없었음
 -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 정책은 결국 남북관계를 이전보다 악화시켰을 뿐 성과가 없었음. 특히 북핵 문제가 더욱 고난도의 과제로 전이됨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여름, 김정일 위원장의 뇌졸중을 계기로 북한 급변사태를 염두에 둔 통일정책을 펼쳤지만, 정작 김정일이 사망해도 별다른 동요 없이 권력승계가 발생함
- 급변통일론의 유혹과 위험
 - 점진적·평화적 통일과정은 길고도 험난한 과정임. 북한 급변사태의 가능성이 전무하지는 않기 때문에 급변사태 이후 흡수통일에 대한 유혹이 존재(동·서독 통합의 사례도 업존)
 - 우리 헌법과 남북관계특별법을 위시, 기존의 모든 남북 지도자간 합의(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 10.4정상선언)가 갖는 의미가 심대함
 - 북한의 체제 내구성, 정세 변화에 따른 조정능력, 정세별 대응책 구사, 중국의 주변 소국 안정화 전략으로 인해 실제 급변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음
 - 한편, 급변사태는 감당하기 힘든 대재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교류협력을 통해 예방해야 할 시나리오

7.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 구축 논의
 - 이론적으로 지역다자안보협력은 예방외교, 신뢰구축, 갈등해소, 군비통제를 공통적 요소로 삼음(1973~75년 헬싱키프로세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구축에는 여러 방안들이 제기되어 왔고 실제 많은 논의가 있었음
 - 그 흐름의 한 갈래로 2005년 6자회담 9.19공동성명에 안보협력 메커니즘

수립 합의가 포함되어 있으며(이미 W/G이 두 차례 실무회의를 개최), 이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 하나의 도정이 될 수 있을 것임

○ 동북아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과 가능성

- 동북아 역내 지역안보협력 메커니즘이 절실하다는 데는 합의가 존재. 미·중·러 공히 이전에 비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2010년 천안함사태, 2011년 후쿠시마원전 참사는 역내 안보협력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임
- 북한은 북미 적대관계 등 양자간 관계의 개선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면서 다자안보협력 메커니즘 논의에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왔지만, ‘9.19합의’가 포괄적으로 이행될 경우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어짐
- 한반도 비핵화의 일정한 진전, 즉 ‘2.13합의’의 불능화 단계를 완료할 경우, 동북아 6개국 외무장관회의 개최와 동북아판 ‘헬싱키프로세스’가 개시될 수 있을 것임

❖ 저자 약력

■ 이수훈

現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일본 게이오대학 초빙교수. 부산대학교 영문학 과를 졸업하고 미 Johns Hopkins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 『세계체제, 동북아, 한반도』, 『동북아 공동의 미래를 생각한다』 외 다수의 논저가 있음. 대통령 자문 동북아 시대위원회 위원장, 국제평화재단 이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

Balance of Military Power in East Asi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 Bong-Jun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Recently, the instability of security in East Asia has become more serious. Except for the United States, which is faced with the task of economic recovery, and is not currently embroiled in a war, countries in the region are increasing their defense budget from the long-term perspective. The current ratio of their defense budget to GDP suggests that they will increase their defense spending on a mid-term basis. The amount of weapons imports, particularly by China and South Korea, is also increasing steadily.

Nevertheless, the United States maintains overwhelming military power in the region in terms of strategic attack capability. Recently, however, China has sought to enhance its military operational capability in the region and Russia is taking similar action.

Negative diagnoses have been made of this situ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realistic theories like balance of power theory, power transition theory, offensive realism, and defensive realism. If countries in the region pursue realpolitik strategies based only on a vague expectation of deterrent effects, as indicated by the war stage model, the instability of East Asia will deteriorate further and the long-term prospect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ill darken.

Under such circumstances, the country needs to adopt a policy of middle-power diplomacy to produce public goods for peace from a perspective of collaborative security.

Risk Factors Develop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Potential Counter-measures

YI Seong-Woo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Conventionally, the concept of security used to refer to war, armed provocation or local clashes. Then, the term comprehensive security emerged as a concept expanded to include crises such as natural disasters or calamities or problems with a country's core infrastructure and with public safety. It is necessary to re-orient our understanding of security-related risk factors at a time when the new security paradigm is displaying a tendency to integrate conventional security with non-traditional security.

With regard to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security-related risk factors can be classified from a tempo-spatial perspective, as follows: 1) internal risk factors, 2) external risk factors, and 3) those associated with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Internal risk factors existing from the past are composed of 1) ideological conflict, 2) regionalism, and 3) class conflict. External risk factors that have newly emerged amid the increase in exchange and collabo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in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nclude: 1) multicultural integration, 2) cybercrime, 3) international crime/terror threats, and 4) the spread of anti-Koreanism. Risk factors that could emerge in a newly unified Korea include: 1) equal opportunities, 2) integration under the market economy, and 3) cultural heterogeneousness.

This study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of a survey on the opin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concerning the aforementioned ten risk factors in three sectors.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Issue

LEE Su Hoon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Northeast Asia is currently faced with a geopolitical crisis. In the region, American hegemony is receding, while China is rapidly emerging as a new power as a result of a huge power shift. The U.S.-led regional order, which was established following the end of WW II, is disintegrating. Under such circumstances, issues concerning territory, history, alliances, etc. are emerging.

South Korea is faced with a dilemma due to the ongoing power struggl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region.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led by President Roh Moo-hyun dealt with the challenge based on a policy package called "The Initiative for the Northeast Asian Era." The current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s dealing with the challenge under the so-called "Northeast Asia Peace and Cooperation Initiative." The initiatives represen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olve to play an active part in the work of establishing a new order in the region.

At present, the country's most hard-to-handle issue is North Korea. The country has been assigned the task of solving the problem caused by the North's nuclear program peacefully and encouraging the North to act as a member of the regional community. The North's nuclear program is the most serious threat both to the establishment of a regional order in Northeast Asia and to any prospect of making substantial progress in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We should continue to do what we can do to achieve the non-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mprove the relationship with the North through negotiations.

Regional Cooperation in East Asia & Peace in Korea Peninsula

3

US Under Secretary of State Wendy Sherman's Controversial Remarks
and Regional Architecture 2015

LEE Hun Mi (Senior Researcher, Seoul National University)

6

Balance of Military Power in East Asia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 Bong-Jun (Associate Professor,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3

Risk Factors Developing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Potential Counter-measures

YI Seong-Woo (Research Fellow, Jeju Peace Institute)

36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North Korean Issue

LEE Su Hoon (Professor, Kyungnam University)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697-858)

전화: 064) 735-6500 팩스: 064) 738-655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